

발간등록번호

12-1081000-000006-01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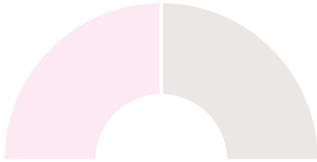
서 문

분단 70년을 맞아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한국인들의 염원과 열망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남북한 주민이 하나 되어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준비 또한 구체화되고 있다.

그간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현지 외국인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나, 내용이 익숙지 않은 재외동포와 외국인들도 간결한 설명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다.

한반도 분단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북한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을까? 한반도



통일은 왜 해야만 할까? 대한민국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 책은 이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방안과 노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재외동포의 자녀들이 함께 통일 문제에 공감하고 성원해주기를 바라며, 국제 사회와 세계인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지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기원 봉화제(2015. 8. 14. 서울 남산)



목차

I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비전	07
II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고착화	25
III	북한의 현실	37
IV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노력	59
V	박근혜정부의 통일 준비	73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I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비전



I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비전



청소년들이 참여한 통일골든벨

한반도의 분단과 대한민국 발전

한반도는 1945년 일본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본의 식민지배 종식 이후에도 단일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분단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5년만인 1950년, 북한 공산정권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한국인들은 잔혹한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다.

해방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올림픽, 월드컵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중견 국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의 성공적인 모습이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8억5천만 달러 규모(2014년 기준)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신만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빈곤퇴치와 세계번영에 기여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많은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비전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공간적 통합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개방국가로 재탄생되는 기회다. 또한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터전을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국가는 남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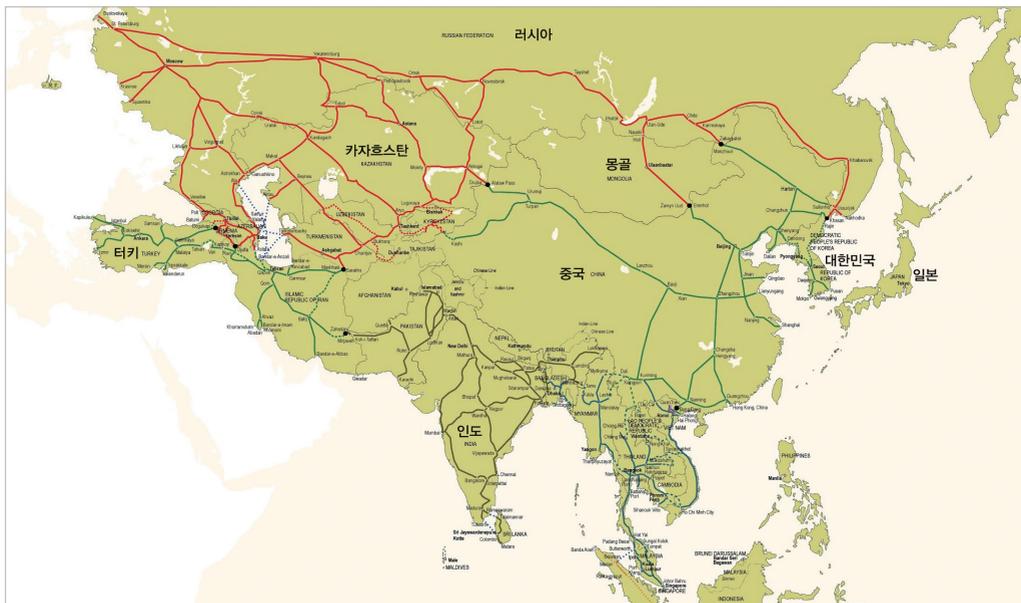
주민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에 더 많은 선택과 확대된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이 미래를 향하여 화합하는 통로이며,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확고히 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통일은 오랫동안 둘로 갈라져온 남한과 북한을 지리·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는 일이다.

지리·공간적 차원

통일은 분단된 한반도의 통합이다. 그동안 한반도는 그 허리가 잘림으로써 국토 이용이 왜곡됐다.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 지역은 민간인 통행이 제한되거나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은 한반도 전체에서 보면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분단으로 인해 남한의 북쪽에 위치함으로써 안보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북한도 분단으로 인해 국토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통일한국은 휴전선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반도의 공간통합은 통일 이전과 같은 폐쇄적 공간구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 공간구조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반도 국가이며, 동시에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일원이다. 분단은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했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섬 아닌 섬’ 생활을 해 온 것이다. 통일한국은 남으로는 바다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



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과 연결된 한반도

양 국가들과 연결되고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 국가들과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문자 그대로 반도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를 타고 유럽여행을 가고, 자동차를 몰고 중국으로 휴가를 떠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육로를 통한 대륙 진출의 꿈이 실현되면서 한민족의 생활환경과 사고영역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간 통합 효과로 인해 한국 상품의 수송비와 수송시간을 크게 절감하는 등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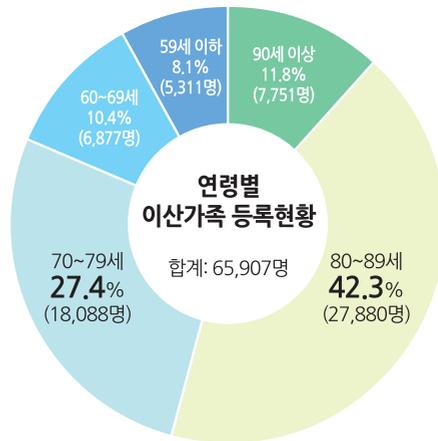
정치적 차원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 지배, 분단, 남북 간 갈등을 거치면서 남북한 주민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통일은 자유가 신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로 거듭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국가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정치체제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기약없는 이별.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져 고통받는 1,000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는 수단이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출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2015. 9. 현재)

떠난 수만 명의 탈북민에게도 통일은 인간 삶의 기초인 가족공동체의 진정한 복원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일원이 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바탕으로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차원

경제적으로는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통일이 되면 총인구는 8,000만 명에 가깝게 되고 노동과 소비시장도 확대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비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한국 상품의 국제경쟁력도 높여줄 것이다. 또한 확대된 내수시장은 외부의 경제적 변화를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다. 안보불안이 해소되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한 투자회사는 북한은 ‘리스크’가 아니라 ‘통일 한국의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북한의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 지하자원과 인구 구조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북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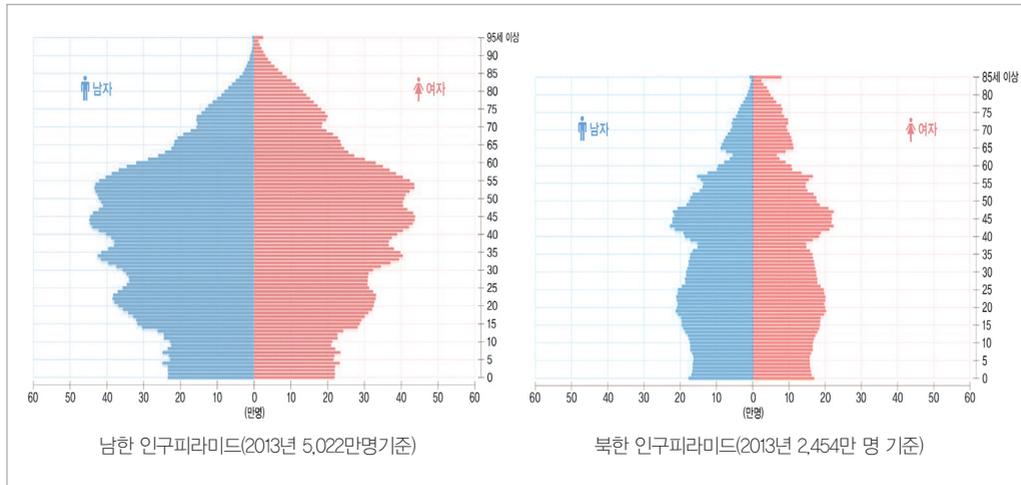
북한이 경제적 난국에 직면한 이유는 북한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그 질이 나빠서가 아니다. 북한은 인센티브가 결여된 동원경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시장경제의 확산, 그리고 북한의 잠재적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적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북한은 노동력이 풍부하며 노동경쟁력도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서 우수한 편이다. 북한의 노동력은 3분의 1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산업인력으로 전환될 잠재력이 높다. 게다가 북한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결합을 통한

〈남북한 인구피라미드〉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

시너지 효과이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마그네사이트, 석탄, 우라늄 그리고 철광석이 풍부하다. 남한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6대 전략광물(역청탄, 우라늄, 철광석, 구리, 아연, 니켈)의 상당량을 북한에서 얻을 수 있다. 한국이 에너지와 지하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회·문화적 차원

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지속하게 하는 토대다. 통일한국은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사회적으로는 보다 다원화되고 자율적인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분단은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이념적 대립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제반 집단 간 불신과 대립, 갈등을 초래했다. 통일한국은 국민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이 발현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조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문화적 다원주의가 정착될 것이다.

물론 통일이 될 경우,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남북한 주민 간 편견과 차별의식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역사에 비춰 볼 때 분단의 역사는 순간이며, 통일은 구성원 간의 일체성 및 소속감을 일깨워 줄 것이다.

통일이 되면 국민 생활 수준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단비용으로 지출되던 재원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전환하고 남북한 모두 젊고 생산적인 인력의 상당수를 국방에 투입해야 했던 비효율이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계층에 따른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장애인·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족 등 소수자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늘려나가게 될 것이다.

통일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은 보편적 역사 교육을 등한 시해 왔을 뿐 아니라, 근대사의 경우 철저히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기술해 왔다. 통일은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를 목적으로 왜곡 서술된 북한의 역사관을 바로잡고, 북한 주민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의미

통일한국과 국제 사회

통일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와 다변화를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 그리고 세계인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높아진 경제적 위상과 한민족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이리

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를 연결하여 전 세계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중국·일본·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활성화에도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동아시아권 경제가 팽창하면 이에 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교역 물동량도 함께 증대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요충지이자 중개수송의 교량으로서 부상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의 가속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 차원의 교류 규모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통일한국은 주변 국가들과 갈등할 이유가 없다. 주변 및 세계와의 경제적 협력은 물론이고, 최근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초국경 질병·테러·마약·환경·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가할 것이다. 통일을 통해 한국은 결집된 민족의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 사회와 주변국이 얻는 편익

통일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떤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제44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 대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남북

한의 통일은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안정을 의미한다. 우선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핵위협이 제거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의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 안정된 동아시아 질서는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도 안보 갈등이 심화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적인 협력질서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관련 주요국에서 개최된 평화통일포럼

통일한국은 평화애호 국가이자, 문화적으로 번영한 중견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환경·재해·초국경 질병·테러·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 될 것이다. 더 안전해지고 번영하는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 아닌 세계 시민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근대화 초기 식민지로서의 암울한 역사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은 정치·경제적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통일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제3세계 모든 국가와 기꺼이 나눌 것이다. 제3세계와 통일한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의 탄생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에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국가다. 통일한국은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더 번영하고 민주화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한국은 미국, 유럽, 중국, 아세안 등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국가다. 통일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막대한 자원을 가진 시베리아, 그리고 경제 강국 일본 및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시아·인도 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및 서방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통일한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통일한국은 전 세계와 동아시아 내륙의 심장부를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에서 출발하는 대륙 횡단 열차는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게 된다. 즉, 세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계는 통일한국을 통해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확실한 관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거대한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게 된다. 통일한국은 대륙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접경하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중국에게 통일한국의 탄생은 불안정한 동쪽 변경의 안정과 동북 3성의 발전에 필수적인 '바다로의 출구'의 완성을 의미한다. 발전하는 통일한국은 러시아의 자원을 필요로 하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통일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러시아에게 통일한국의 탄생은 시베리아 극동지역 발전의 계기를 의미한다.

한반도는 반만년 이상 대륙 국가들의 핵심적인 우방이자 이웃이었다. 통일한국은 서구적 가치와 동양의 전통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가 번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동적인 한반도와 대륙의 잠재력이 결합됨으로써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문화적 협력도 주력하고 있다. 통일한국과 중동 각국은 대륙과 해양을 통해 동시에 연결함으로써 현재의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의 한반도 통일 지지〉

미국

“미국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함”
(‘14.4.25 한미정상 공동성명)

중국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함”
(‘14.7.4 한중 공동성명)

러시아

“러시아는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하여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함” (‘13.11.13 한러 공동성명)

ASEAN

“한국과 ASEAN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및 신뢰를 증진함에 있어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
(‘14.12.12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성명)

UN

“유엔은 신뢰구축, 평화, 안정을 중시해 왔는바,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 가능성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올해 초 남북당국 간 대화제의 및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15.5.19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EU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 EU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개선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함.” (‘15.9.15 한·EU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국제사회에 통일정책을 설명하는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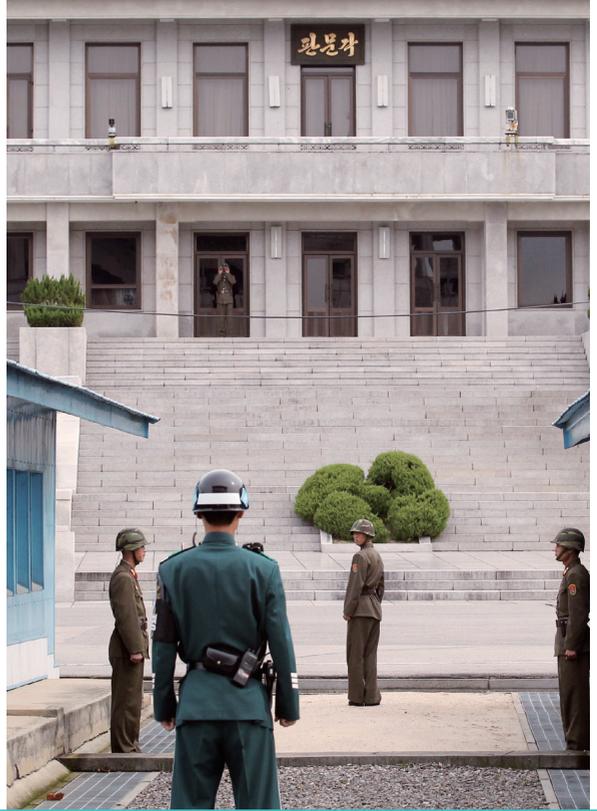
II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고착화



II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고착화



긴장감이 감도는 남북분단의 상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한반도 분단과 남북 대립

분단의 진행

2차 대전이 종전에 임박한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북쪽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단독으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막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은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분할해서 한반도의 공동점령을 제안했다.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받

아들였고 한반도의 남쪽에 미국, 북쪽에 소련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각각 미국군정과 소련 군정이 실시되었다.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통일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도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는 국제정세와 공산주의자들의 획책 등으로 인해 남북 간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상들이 모여 한반도에서의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안을 결정했다. 일본으로부터 35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신탁통치 하에 들어가는 것은 남북 주민에게 다시 식민지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족주의자들이 반탁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나 공산 진영에서는 찬탁으로 돌아섰다. 이에 신탁통치를 둘러싼 갈등이 거세게 일어났고, 미국과 소련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모색했으나 미·소협상은 결렬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반도 통일방안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유엔 결의를 거부했다. 1948년 2월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남쪽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를 재결의했다. 북한이 총선을 거부한 가운데, 1948년 5월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했다. 유엔총회는 같은해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다.



5·10 총선거(1948. 5. 10.)/(출처 :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1948. 8. 15.)/(출처 : 국가기록원)

한편 북쪽에서는 소련의 후원하에 공산화가 진행되었다. 1948년 2월 조선임시헌법초안이 발표되었고,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북쪽에서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정규군을 창설한 것이다.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1948년 9월 9일에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6·25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남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 양측은 체제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승인에 따라 김일성은 전쟁을 도발하였다.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도모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신생국가로서 국가체제를 갖추어가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선전포고 없이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했다. 당시 한국은 북한군을 당해낼 수 없었고, 전쟁 시작 3일 만에 수도인 서울이 함락되었다. 북한군은 7월 말에 한반도의 남쪽인 낙동강까지 진출했다.



6·25전쟁 당시 피난길에 나선 수많은 피난민들
(출처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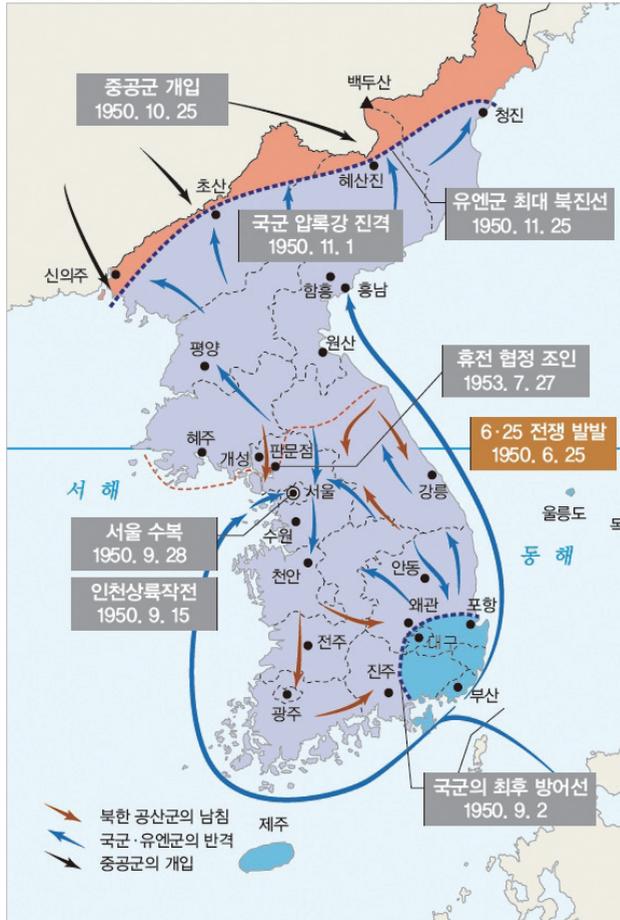


서울시내에 들어선 북한군의 탱크
(출처 : 국가기록원)

유엔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행동을 평화에 대한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이 38도선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국은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하여 북한의 남침에 대응했다. 맥아더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으며, 북한군은 38선 이북으로 퇴각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6·25 전쟁 상황도(출처 : 국가보훈처)

듯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이 참전하여 전쟁의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휴전선 부근에서 진퇴를 거듭하던 양측은 휴전회담을 시작했으며,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만이 서명했다. 6·25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채 끝이 났고, 남북한 모두가 사회경제적 기반을 상실했다.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의 이질적인 국가로 변해갔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뉜 채 60년 이상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한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정전협정만 체결함으

로써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상태인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은 중요한 과제이다.

〈6·25 전쟁 남북한 민간인 피해〉

(단위: 명)

계	남한						북한
	소계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2,490,968	990,968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1,500,000

※피난민 320만여 명, 전쟁 미망인 30만여 명, 전쟁 고아 10만여 명 발생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 이슈 100』

〈6·25 전쟁 남북한 군인 피해〉

(단위: 명)

구분	계	사망	부상	실종·포로
한국군	608,033	137,899	450,742	19,392
북한군	607,396	508,797	.	98,599

※6·25전쟁의 피해규모 추산은 연구자 발표 기관에 따라 오차가 존재함.
※유엔군 15만 1,500명 / 중국군 92만 1,836명 사망·실종·부상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 이슈 100』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긴장

지속된 북한의 도발

6·25전쟁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발에 시달렸다. 60년대 후반 청와대 습격,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사건 등 북한은 6·25전쟁 이후 육상 및 해상

〈북한의 도발 사례〉

청와대 기습 사건(1968. 1. 21.) : 북한군 124군 소속 무장 게릴라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등 대한민국의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하여 다수의 군인과 경찰,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북한군 1명이 생포되었고 2명은 도주, 28명은 사살됐다.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1968. 10. 30.~11. 2.) : 한국의 동해안 지역인 울진, 삼척지구에 세 차례에 걸쳐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2개월간 작전을 펼쳐 공비 113명을 사살했으며, 7명을 생포했다.

미안마 아웅산 폭탄테러(1983. 10. 9.) : 전두환 대통령의 버마(현 미얀마) 방문 중 아웅산 묘지에서 북한이 저지른 테러사건이다. 참배 준비 중이던 대한민국 부총리, 외무부장관 등 17명의 요인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버마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며 미국, 일본 등 69개국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KAL기 폭파(1987. 11. 29.) : 북한공작원 김현희 등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88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바그다드를 출발하여 아부다비를 거쳐 방콕으로 향하던 민간 항공기인 KAL858기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폭파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승객 및 승무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1차 연평해전(1999. 6. 15.) :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 10km 지점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영해를 침범, 우리 함정에 선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남북함정 간 첫 포격전이 발발했다. 6·25전쟁 이후 남북 정규군 간의 첫 해상 전투다.

2차 연평해전(2002. 6. 29.) : 1차 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우리 참수리 경비정 배후를 기습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북한 해군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에서의 침투행위를 비롯하여 총격, 포격, 습격, 해상교전과 선박납치, 영공침범과 미사일 발사 등 총 3,040건에 이르는 도발을 자행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북한은 남한을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에 맞아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장병 40명이 사망하였고 6명이 실종되었다.

또한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의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포격으로 인해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 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이 우리 영토에 처음으로 포탄공격을 한 도발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교역 및 투자, 대북지원사업, 인력왕래 등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분단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을 통일해야 할 대상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백령도 해상에서 피격된 천안함



2010년 11월 연평도 폭격 사건

남북한 경제적 격차의 심화

분단과 6·25 전쟁을 겪은 남북한은 모두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였다.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약간 앞서 있는 정도였다.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온 반면, 북한은 80년대 이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하다 90년대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한 결과 현재 세계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1인당 소득은 138만원(한국 만원)으로 2,870만원인 남한의 21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3분의 1, 대외무역 규모는 147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통일을 이루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남북한 지표〉

(2013년 기준)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인구			농수산물 생산량		
남북한 인구	50,220천명	24,545천명	식량작물	4,833천M/T	4,806천M/T
인구밀도	501명/km ²	199명/km ²	쌀	4,230천M/T	2,101천M/T
			수산물	3,135천M/T	749천M/T
국민계정			광물 생산량		
경제성장률	3.0%	1.1%	철광석	663천M/T	5,486천M/T
명목GNI	1,441,064한국십억원	33,844한국십억원	연	460천M/T	93천M/T
1인당GNI	2,870한국만원	138한국만원	아연	887천M/T	305천M/T
대외경제			주요공산품 생산량		
무역총액	10,752.2억달러	73.4억달러	자동차	4,521.4천대	4.0천대
대미환율	1,095.0원/달러	99.7원/달러	조강	66,061천M/T	1,210천M/T
수출액	5,596억달러	32억달러	시멘트	47,291천M/T	6,600천M/T
수입액	5,156억달러	41억달러	화학비료	2,577천M/T	485천M/T
			화학섬유	1,458천M/T	25천M/T
에너지산업			사회간접자본		
원유도입량	915,075천배럴	4,237천배럴	철도총연장	3,590km	5,299km
수력발전전력량	85억kWh	139억kWh	도로총연장	106,414km	26,114km
화력발전전력량	3,586억kWh	82억kWh	항만하역능력	1,063,669천톤	37,000천톤
수력발전설비용량	6,454천kW	4,283천kW	선박 보유톤수	1,358만G/T	73만G/T
화력발전설비용량	56,280천kW	2,960천kW			
석탄생산량	1,815천M/T	26,600천M/T			

출처 : 통계청, 북한통계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III

북한의 현실



III 북한의 현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한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

3대 세습과 이미지 연출

북한의 김정은 체제 : 3대 세습의 유일지배체제

북한 주민들은 최고지도자를 절대적 존재로 숭배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는 수많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건립되어 있으며,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 궁전'을 신성시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태양절'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지정해 최대의 명절로 여기고 있으며, 모든 가정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 놓고 생활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은 조선노동당의 최고직책인 제1비서와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 정부기관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당과 정부, 군의 최고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중적 모습 : 공포정치와 애민적 이미지

김정은은 짧은 기간에 그친 후계 수업과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북한 체제를 과연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는 공포정치와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 군부와 권력엘리트들의 충성경쟁을 권력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이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잔인하게 처형(2013년)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공포정치를 시행하는 한편,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다가가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부인 리설주를 공개 자리에 대동하면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정책을 지도하는 ‘현지지도’라는 독특한 정책수행방식을 행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5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한 직후 이례적으로 최초의

현지도 장소로서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을 선택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업적을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살림집’ 건설 등의 업적을 통해 통치성과를 과시하려 하고 있다.



체포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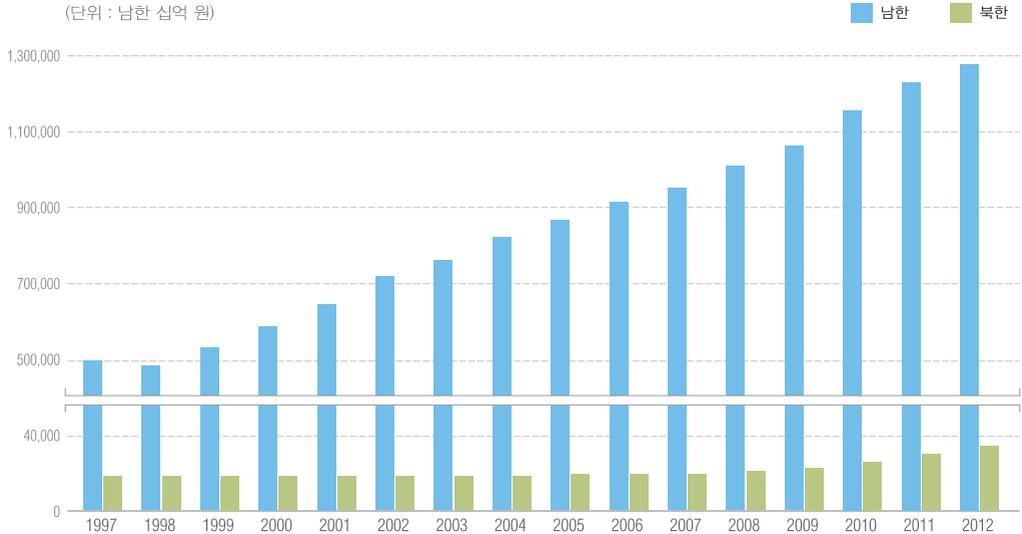
실패한 계획경제와 새로운 경제정책 모색

실패한 북한식 계획경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1990년대 중반, 북한 스스로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북한의 계획경제는 사실상 붕괴상태에 빠졌다. 경제난으로 국가가 재원을 지

원해주지 못하면서 많은 공장이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 명목 GNI〉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북한은 국가 재정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우선으로 무연탄, 철광석 등 천연자원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김정은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단지’ 개발, 경제특구 확대 등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노동자를 해외에 수출하여 인건비를 벌어들이는 노동력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생활 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개혁 조치와 그 한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경제정책에서 ▲공업과 농업부문의 자율성 확대와 ▲경제 특구 확대를 통한 제한적 경제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6월 28일 북한은 ▲협동농장 분조인원 축소(포전담당책임제*), ▲기업의 경영자 율권 확대, ▲서비스 무역분야 개인투자 합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방법(6.28방침)'을 발표했다.



북한 신의주 특구 · 13개 경제개발구(출처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또한, 2013년 11월 21일에는 신의주 특구 및 해산 경제개발구를 포함한 13개 국가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했다.

* 2004년부터 협동농장의 생산단위인 분조내에 노동단위 규모를 7~8명에서 가족규모와 유사한 3~5명 수준으로 축소하여 가족단위 영농이 가능하도록 시범실시한 제도

이러한 조치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억압과 통제위주의 정책으로는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부족, 준비부족, 기득권 세력의 내부저항 등으로 그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경제개혁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식량 위기의 만성화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 속에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지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인도적 위기는 특히 먹는 문제에서 나타난다.

북한은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공장에 출근하더라도 배급을 받지 못해서 대다수의 노동자가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이 중단되면서 국가의 중앙배급체계에 의존하던 수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급기야 북한 당국은 1995년 유엔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부터 거의 2년 주기로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아동 영양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은 조금씩 나아지

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식량계획(WFP)에서 권장하는 최소 소비량에 크게 못 미쳐 식량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의 급성영양실조와 만성영양실조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012년에 이루어진 실태조사에서는 다행히 아동의 영양실태가 조금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아동들의 급성영양실조와 만성영양실조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단위: 만 톤)

구분 \ 년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산량(A) (FAO기준)	322	462	467	407	446	435	441	469	504
지원량(B) (WFP자료)	114	117	35	77	33	30	10	5	36
계(A+B)	436	579	502	484	479	465	451	474	540
최소소요량 (FAO기준)	500	518	521	523	526	529	531	534	536
부족량	64	△61	19	39	47	64	80	60	△4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 2014, 166p (북한의 식량 수급 추이) 재편집.

‘장마당’ 등 다양한 생존 방식의 모색

북한 당국이 체제를 지탱하는 엘리트 위주로 배급을 주면서 일반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당국의 묵인 아래 북한에는 ‘장마당’으로 불리는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활용하여 생존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북한 당국은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들만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남자들은 직장에 묶어 두어 조직 생활을 통해 통제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북한 당국으로부터 배급을 기대하는 주민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활용뿐만 아니라 개인 소토지를 개간하고, 가내수공업 형태로 일용품을 만들어 팔고, 임금노동자로 먹고사는 등 생존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의 장마당

사회통제 속 사회변화의 진행

개인소유 의식의 태동과 신흥부유층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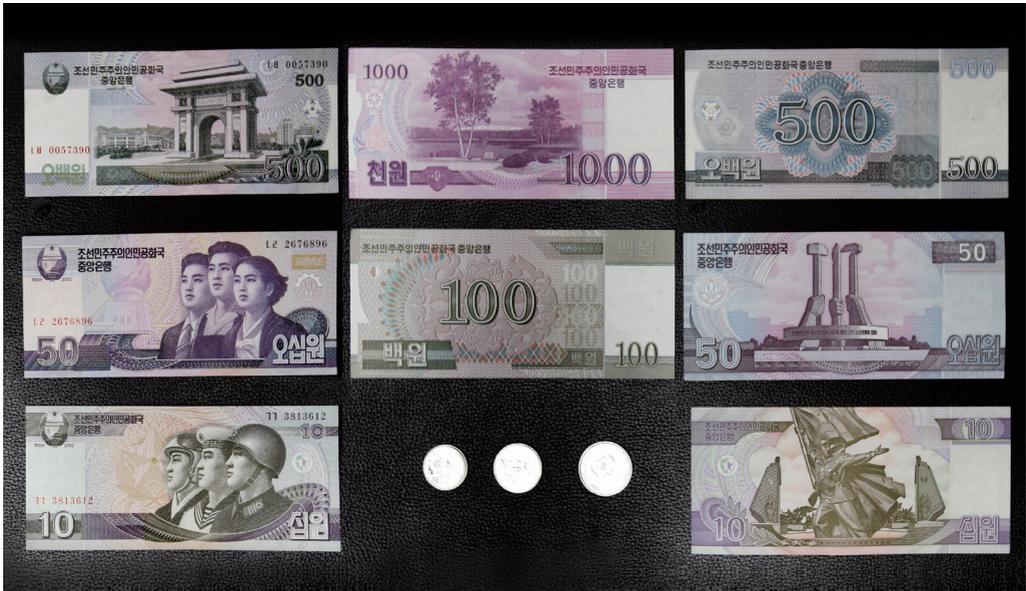
새로운 변화 속에서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의 의식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고 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확산되고,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윤추구 의식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성분’과 ‘토대’라는 출신을 기준으로 정치적, 경제적 차별을 일삼던 북한 사회에서 최근에는 누가 돈을 더 잘 버느냐는 것이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북·중 간 밀수, 지역 간 부족한 물자를 유통해 이익을 얻는 장사,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장사 등 장사의 유형도 전문적으로 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 돈을 많이 번 신흥부유층도 생겨나고 있다.

시장 내 외화거래의 확산

시장이 확산되면서 시장 거래에서 통용되는 화폐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09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화폐교환을 단행하였다. 신·구 화폐를 1:100의 비율로 전격 교환하는 조치였다. 동시에 가구당 북한 원화 10만 원(후에 50만 원으로 조정)까지만 교환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축적한 화폐를 대부분 상

실패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북한화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규모가 큰 거래는 주로 중국 인민폐(위안화) 또는 달러로 거래하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화폐(2009년 발행된 신권)

사회통제 속 정보 유통의 확산

폐쇄성은 북한체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인민 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하여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정보에 대해 자본주의 ‘황색바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북한사회에는 다양한 형태로 정보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휴대전화의 보급과 외부 정보의 유입

북한 자체적으로 전파를 송신하는 휴대전화가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인기상품이다. 단말기 구입에 적지 않은 돈이 들 뿐 아니라 통화료도 비싸 일반 주민들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인터넷 사용과 국제통화가 금지되어 있다. 비록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의 정보가 유입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정보가 소통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송금망도 없는 실정이지만, 휴대전화 송금망이 형성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지역에서는 중국 기지국의 전파가 수신된다. 국경지역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외부와 통화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는 중국과의 밀수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과 북한에 사는 가족과의 통화에도 사용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작년 5월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이용자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 평양시내에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북한 내 ‘한류’의 은밀한 확산

남한의 물건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인기가 좋다. 북한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한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북한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남한의 방송물이나 영상물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 예전에는 CD나 테이프 형태로 유통되던 것이 최근에는 USB로 유통되어 단속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설령 단속이 되더라도 단속원에게 뇌물을 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증언들이 있다.

열악한 인권 상황

표현의 자유 박탈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북한 당국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선전을 위해 주관하는 집회 이외에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동창회와 같은 친목 모임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이 허가한 단체 이외에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견해를 대변할 조직을 결성할 수 없다.

신앙의 자유 제약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체제에는 종교를 허용할 수 없는 구조적 속성이 내재해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최고지도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를 허용할 경우 수령의 권위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 평양에는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2개의 교회와 1개의 성당, 1개의 러시아정교 사원이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이들 종교시설 이외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종교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사찰도 있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종교시설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단지 문화유적지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다. 북한 당국은 종교 행위에 연루되어 발각될 경우 정치범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 참혹한 삶

유엔은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가장 참혹한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치범수용소다. 김일성 가계·체제와 정권에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이 정치범들은 일반

사회와 완전하게 차단된 지역에 갇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다.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는 일이 많다. 이들을 관리하는 보위부원에게는 절대복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형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범이 무서운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요덕수용소, 개천수용소, 명간수용소, 청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용소, 북창수용소 등 5개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영양부족과 강제노동, 잔혹한 처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향을 등지는 탈북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이동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체제유지를 위해 당국이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이외에는 북한 주민의 해외여행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으로 진입하고 있는 탈북자들(200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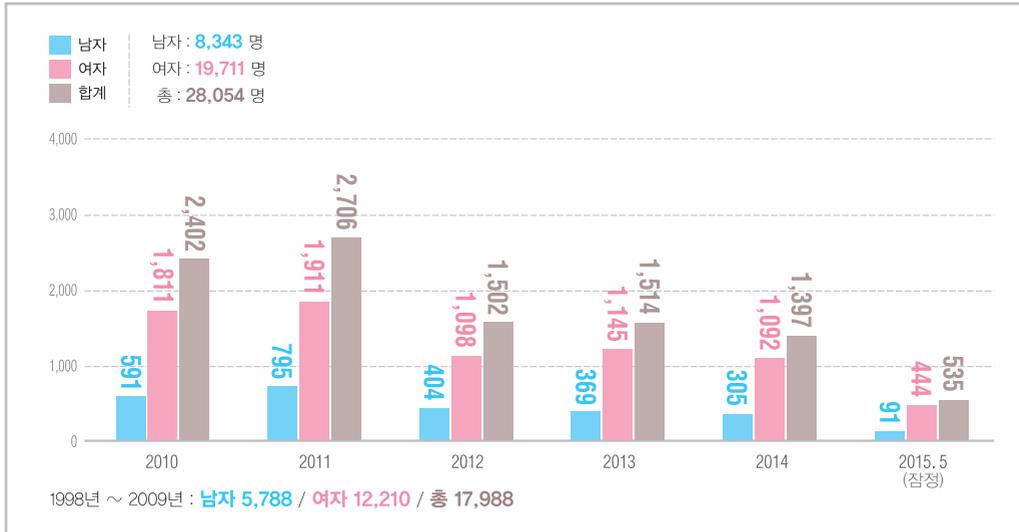
1990년대에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굶주림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존을 위해 탈북을 감행하였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협정에 따라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범죄자로 취급한다. 따라서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탈북민들은 불법월경자라는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국 땅에서 숨어서 살고 있다. 체포의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 신분 불안정에 따른 생계와 보건의료의 문제, 언어 소통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처벌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면 탈북민들은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탈북 행렬이 이루어지던 초창기에 북한은 형법상 ‘조국반역죄’를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탈북을 감행함에 따라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의 노동단련대로 보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으로 가려다 붙잡혔거나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사람과 접촉하거나 교회에 연루될 경우 여전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남한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화소’에 수감되거나 일부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이탈주민 현황〉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탈북민들은 초창기에는 식량을 구하거나 돈을 벌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점차 남한 등 제3국에서 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비용을 지불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거쳐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부 탈북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도 한다.

핵개발 지속과 국제적 고립의 심화

핵개발 지속

1990년대 초반,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제1차 북한 핵위기가 조성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이에 맞서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차 핵위기는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간 ‘기본합의문’이 체결되면서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다.



북한 영변에 위치한 핵시설 모습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제2차 북한 핵위기가 시작됐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미·중·일·러 그리고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의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했다.

6자회담은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한 이래 2007년 9월까지 수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5년 9월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불공격, 북미간 신뢰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핵실험의 강행과 국제사회의 제재

국제사회의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채택하였다.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6월 12일 안보리는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7일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일지〉

구분	1차('06.10.9)	2차('09.5.25)	3차('13.2.12)
위력	지진규모 3.9 / 1kt 이하	지진규모 4.5 / 2~6kt 이하	지진규모 5.0~5.1 / 6~7kt
결과	핵폭발 성공 폭발위력 제한	핵폭발력 증대	핵폭발력 증대

북한의 '핵보유국'화 기도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려고 한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고, 2013년에는 '핵보유국'을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핵개발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위협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최대 위협으로 주변 국가들의 군사경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IV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노력



IV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노력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적대적 대결관계에서 선의의 경쟁관계로 : 70~80년대

국제적 데탕트와 7·4공동성명

1953년 정전협정으로 6·25전쟁이 종료되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채 정전상태로 남게 되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이어졌고, 전쟁으로 인한 남북 간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한반도에는 ‘적대적 체제경쟁’이 지속되면서 1960년대 말까지 남북은 침예하게 대립했다.

냉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1972년 2월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1972년 9월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등이 진행되는 등 국제정치 환경이 화해 무드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박정희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에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적대적 대결관계’에서 ‘선의의 경쟁관계’로 전환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6·25전쟁 종전 이후 한국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인 대북 및 통일구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후 1972년 남북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일원칙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6·25전쟁 종전 이후 최초로 남북이 합의문서를 도출하고 협상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설명’을 발표하여 상호 내정불간섭, 남북 유엔 가입 및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모든 국가 문호 개방 등 적극적인 평화통일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기조를 수립한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체제의 존재에 관한 현실 인정 및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견지했던 ‘할슈타인 원칙’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대북·통일 정책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 : 동독정부를 승인하는 나라는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냉전시대 서독의 외교 기본원칙으로 1955년 서독 외무차관 할슈타인이 작성했다고 하여 이렇게 불렀다.

통일방안 제시와 이산가족 상봉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국교관계를 수립하여 남북한 통일논의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국력이 역전되어 사실상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은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국회와 통일정부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6·25 전쟁 종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후속조치로 서울과 평양간의 도로연결, 남북이산가족의 편지교류 및 상봉실현, 남북한 군사책임자간의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1985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8차 남북적십자사회담에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원칙이 합의되었다. 1985년 9월에는 동시에 판문점을 통과한 방문단이 평양대극장과 서울 중앙국립극장에서 각각 두 차례의 예술단 공연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탈냉전과 통일노력 : 1990년대

헌법상 통일조항 명시

민주화를 겪은 대한민국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하고, 전문에 ‘조국의 평화통일의 사명’을 천명했다. 또한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제66조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평화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했다.



1990년 한·소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1992년 8월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악수하는 한·중 외교장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외교정책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헝가리(1989년)를 시작으로 소련(1990년), 중국(1992)을 비롯하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독일의 통일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남한의 압도적 우위로 체제경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무엇보다도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서명서를 교환하는 남북 총리

독일통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김일성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이지 않는 원칙’에서 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회담을 시작한 이후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지표를 규정하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등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립

1989년 세계적 냉전 종식과 함께 노태우 대통령은 국내적 합의를 담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기존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을 종합하여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반영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통일의 원칙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달성함으로써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원칙 : 자주 · 평화 · 민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원칙으로 ‘자주 · 평화 · 민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배타적인 ‘반외세’ 논리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조화 속에 우리가 통일을 주도해나가는 개방적 자주를 말한다.

‘평화’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민주’의 원칙에 의한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민주적 통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점진적 · 단계적 통일과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에 대해 점진적 ·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간다고 제시함으로써 통일과정을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다. 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 아래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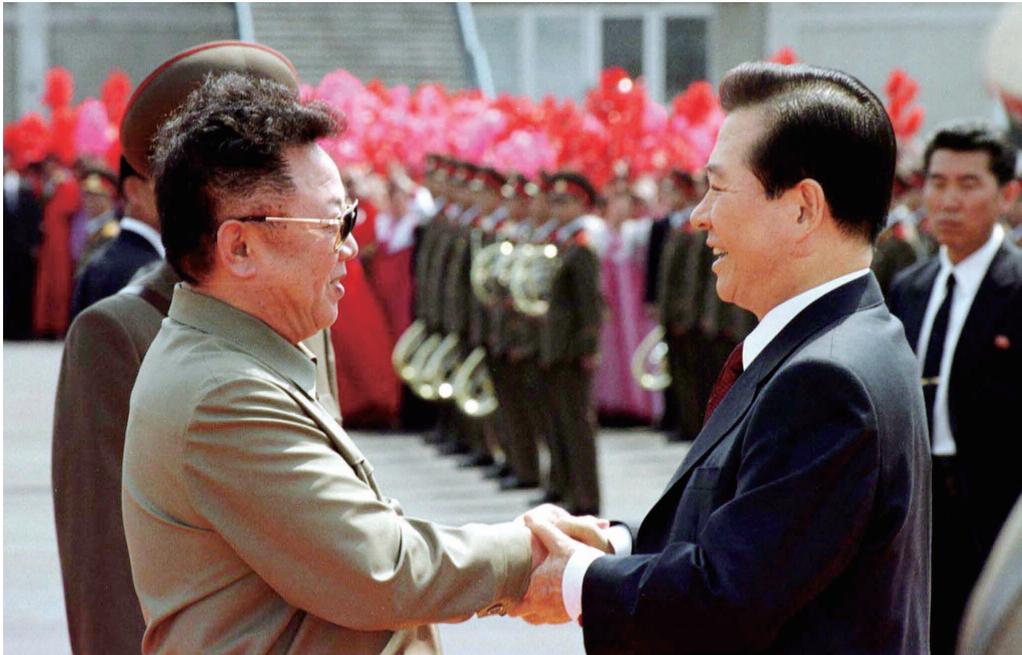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남북 사이의 교류 · 협력을 제도화하는 단계다. 다른 체제와 정부를 유지하지만 교류 · 협력의 제도화를 토대로 남북이 통일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다.

대북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1990년대 말~2000년대

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1998년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000년 6월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첫 만남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결과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선언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하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다.

6·15 공동선언을 토대로 2000년대 초중반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고, 개성공단이 조성되는 등 남북관계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당국 간 대화, 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에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제도화의 틀이 마련되었다.

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

김대중정부를 계승한 노무현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를 주요전략으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를 축으로 민간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등 남북관계 동력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2002년 2차 북핵문제가 발생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

한 도전으로 대두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개최하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전개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7년만인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군사적 긴장완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하였다.

비핵 · 개방 · 3000, 통일준비 공론화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자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규범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하였다.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정책추진, ▲원칙에는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추진원칙으로 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 대규모 지원을 통해 경제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인 ‘비핵 · 개방 · 3000’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항아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통일준비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1950년대 (이승만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공 및 승공통일론 • 남북 각각 정부 수립(1948) • 6·25 전쟁 발발(1950)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경제건설, 후통일론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1971) • 7·4남북공동성명 발표(1972) •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
1980~90년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 • 7·7선언 발표(1988)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198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발표(1989) • 남북한 UN 동시가입(1991)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1994) • 김일성 사망(1994)으로 남북정상회담 무산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화해, 협력정책(햇볕정책) 추진(1998) • 베를린 선언(2000) •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6·15 공동선언'(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번영정책 추진(2003) •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10·4 정상선언'(2007)
2008년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추진(2008) —'비핵·개방·3000'기조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V

박근혜정부의 통일 준비





박근혜정부의 통일 준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박근혜정부는 북한 핵문제라는 현실적 안보문제에 대한 대처와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2013년 2월에 출범하였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그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요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의 발전 • 한반도의 평화정착 • 통일기반 구축
원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있는 접근 • 진화하는 대북정책 •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 •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형성 •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 •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

‘신뢰’의 강조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핵심사항으로 ‘신뢰형성’을 들고, 이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작지만 쉬운 것부터 출발하여 신뢰를 쌓아 감으로써 작은 통일(경제·문화공동체)을 이루고 점차 큰 통일(제도적·정치적 통합)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나 순수 사회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남북이 서로 지킬 수 있는 약속

을 하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는 관행을 쌓아 나감으로써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간다면 북핵문제 해결이나 통일이라는 큰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정상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남북 사이의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상호 신뢰의 부족으로 제로섬 게임 양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 반복됐다.

남북간 교류도 지속성과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 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을 기약하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특히 북한은 도발로 위기 상황을 조성한 다음 타협과 보상을 끌어내는 패턴을 보여 왔다. 남북관계는 도발→위기→타협→보상→재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 양상을 거듭하곤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바로 이 악순환과 비정상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대북정책 구상의 핵심개념이며, 신뢰를 통해 남북관계를 ‘선순환적 발전’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잡고 도발에는 강한 대응과 압박으로 맞서는 대신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바른 선택에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국민이 함께하는 통일, 남북한 주민이 모두 행복한 통일,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 구상과 3대 통로

드레스덴 구상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순방 시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가지 대북 제안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북한의 비핵화 촉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드레스덴 구상)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3대 대북 제안'

①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 북한의 산모와 유아를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1,000days) 사업' 등 인도적 지원 확대

②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 북한 농업·축산·산림 개발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 교통·통신 등 인프라 건설 투자 및 지하자원 개발
-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 및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3각 협력사업 추진

③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 역사·문화예술·스포츠 분야 교류 등의 장려를 통해 순수 민간접촉 확대
- 경제운용 및 경제특구 개발관련 경험, 금융, 조세관리, 통계 등 교육훈련 지원
-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남북한과 UN이 함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북한의 비핵화 촉구

- 북한의 핵포기 결단 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추진

통일을 향한 3대 통로의 개설

2014년 8월 15일 광복절 축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북 간에 환경·민생·문화의 3대 통로를 열어 나아가자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이를 기초로 정부는 현재 여건에서 남북한이 함께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대 통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목표와 원칙에 입각하여 작은 통일에 이르는 방법론을 담은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협력의 통로’란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의 산림복구에 필요한 묘목·종자·방제약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의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

‘민생 통로’란 이산가족 상봉, 인도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주민의 삶이 모두 향상될 수 있는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영유아 사업, 세계식량계획(WFP) 영양공급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북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진행 중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농업·축산·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단체의 온실자재 장비 등의 지원을 허용하였다. 남북 간 대화의 재개되면 복합농촌단지 조성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북지원 물품을 가득 싣고 북한으로 향하는 차량

‘문화 통로’는 통일미래 세대에서 물려줄 한민족의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발굴·보존함으로써 남북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북한 공통의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한 겨레말 큰 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가 2009년 이후로 5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북한의 개성지역에서는 고려시대 왕궁터인 만월대를 공동으로 발굴 조사하는 사업도 재개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체육행사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체육인·청소년 간의 교류를 장려해왔다.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경기대회(9. 19 ~ 10. 4)에는 27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이처럼 공동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남북 동질성 회복과 생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식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한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에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비무장 지대(DMZ)

이 사업은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4.10. 평창)를 계기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제18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15.1. 제네바) 등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북한에 사업 취지를 설명하였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면서 제2차 현지조사 및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북한인권 개선노력

북한인권 개선활동 추진과 지원

한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학술회의, 자료발간, 캠페인, 문화행사 등 민간단체의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북한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개설 되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북한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열악한 인권실상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2003~2005년), 유엔인권이사회(2008~2015년), 유엔총회(2005~2014년)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이 유엔의 인권결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국제범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임무를 수행할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해 더욱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비협조로 북한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공청회, 탈북자 심층 조사 등 1년간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2월 17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인도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북한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유엔총회는 북한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 2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인권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인권위원회(2014. 9. 25.)

국내적 통일준비 노력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50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로서,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전문성을 갖춘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0명의 전문위원도 두고 있다. 2014년 8월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후 통일준비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통일관련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분담 및 기능특화를 통해 통일준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 아젠다를 연구 및 심의·의결하고 정책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의한 고유기능인 평화통일정책 자문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 아젠다를 발굴·제안한다. 또한 통일부는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조정한다.

탈북민 정착지원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통일 이후 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2015년 5월까지 2만 8천 54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주택알선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취업·교육·의료 등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이 통일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 자산형성제도 도입을

통한 자립·자활 능력 강화, 탈북청소년 인재육성, 주거 및 의료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탈북민 의료지원 활동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일방적인 강경조치를 강행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잘못된 행동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남북한은 공단 가

동 중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에 맞게 통행·통신·통관, 투자보호, 노무·세무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개선 등을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남북 경협을 진전을 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적극적인 통일외교

한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비전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일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신뢰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면, 신뢰외교는 신뢰를 동력으로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2015. 9. 28.)

이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즉, 한반도 분단이 남북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듯이 통일 역시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병행될 때 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아시아지역은 경제분야에서는 상호의존과 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 있으나, 정치·안보분야에서는 국가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흐름과는 반대로 군비경쟁, 핵개발, 영토와 역사갈등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역사·영토 문제 등의 국가 간 갈등요인은 물론 환경·에너지 문제 등 새로운 국가적 공동위협요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동북아의 평화협력 질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갈등은 더 깊어지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테러·마약·원자력 안전·환경·재난구조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 서부터 다자협력의 관행을 만들고 점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만들어

진 평화질서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개념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해소하고 대립과 갈등의 역내구도를 다자적 협력질서로 만들어 가는 과정(Process)

목표

-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동북아지역에 평화와 협력의 문화 정착
- 역내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기반 확보
-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 나아가 북한의 안보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추진
- 주요의제는 여성안보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면서 참여국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점진적으로 경성안보 분야 의제로 논의를 확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로 대륙과 해양의 축이 연결되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도 촉진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축적된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을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세계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구상을 공식 주창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등 세 가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하고, 전력·가스·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에서 유럽까지 14,400km를 달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 도착한 ‘동일염원 유라시아 친선특급’(2015. 7. 31.)

나진-하산 프로젝트

남북협력에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여건을 마련하여 통일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이다. 이 사업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를 개보수하고 나진항 현대화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는 복합물류 프로젝트이다.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구체화 차원에서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4년 11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시베리아산 유연탄을 러시아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후 선박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두만강 일대 인프라 구축 상황



경원선 철도 복원 기공식에서 철도침묵에 통일염원 메시지를 적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2015. 8. 31.)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민국 헌법(제92조)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대표급 인사 16,700여명과 세계 117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대표 3,300여명 등 총 2만 여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민족적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2015. 7. 1.)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통일여론을 수렴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통일정책을 사회저변에 알리고, 국민들의 평화통일의지를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5년 7월 출범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8,000만이 행복한 평화통일’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통일정책 건의, ▲통일준비의 본격화, ▲통일 미래세대 육성,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상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통일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통일준비 구체화, ▲통일준비 지방화, ▲통일준비 국제화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개발·추진해 나가고 있다.

〈통일준비 본격화 전략〉

통일준비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 법·제도 기반 확립 • 남북경협, 북한개발 정책,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 남북 통합대비 통일준비인력 양성
통일준비 지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시·도간 매칭을 통한 구체적 협력방안 준비·추진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통일운동’전개 • 시·도 지역회의를 지역사회 통일운동 거점으로 육성
통일준비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자문위원의 통일·공공외교 활동 활성화 •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통일공감대 확산 •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 및 통일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끈기 있게 통일을 준비해 나가면,
평화통일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을 민주평통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대회사 중에서(2015. 7. 1.)〉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발 행 일 : 2015년 10월

발 행 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82-02-2250-2247

발 행 인 : 박찬봉

편집·인쇄 : (주)성우애드컴
+82-02-890-09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